

‘기초연금 40만원’ 수면위… 재정안정 vs 빈곤해결 ‘입장차’

〈국민의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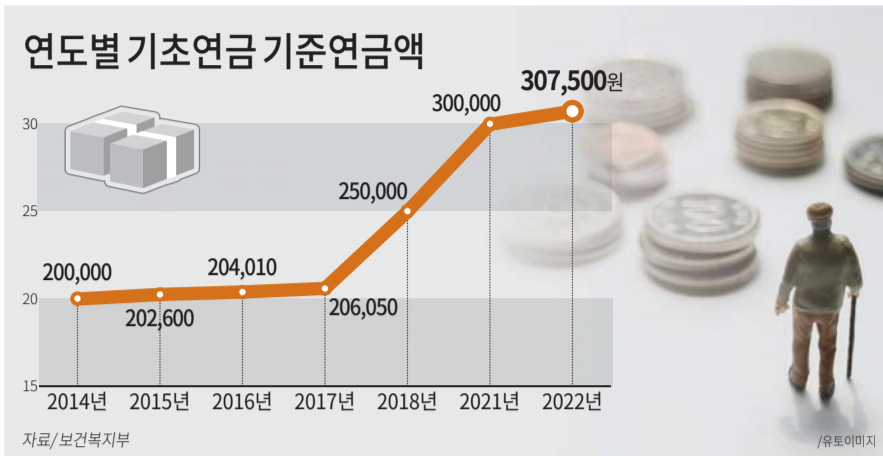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난 대선 후보들, 연금 인상 공약 민주당 입법과제 선정하고 처리 예고
與 “尹 정부 개혁안과 연계해야”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인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뤄지면서 재정 안정과 노후 빈곤 문제 사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2022년 기준 약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다.

급속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 저소득층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빈곤한 고령자가 많아지는 것이 기초연금 인상 추진의



명분이 됐다. 기초연금 인상이 고령층과 예비 고령층을 투표장으로 이끌고 동시에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늘고, 소득대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점도 논의를 가속화한 이유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기초연금 인상 법안을 선택

했다고 밝혔다. 이미 위성곤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15일 기초연금 수령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개정안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액 수급자일 경우

수령액의 20%를 감액하는 것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초연금의 단계적 40만원 인상안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30만75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인상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기초연금 수령액을 월 40만원으로 올리자는 민주당의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기초연금만 40만원, 50만원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쪽짜리 논의”라며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기초연금 인상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5일 한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물론 지금 높일 필요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5년전만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36% 수준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급등해서 현재 50%까지 수준까지 올라갔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올해 21조원에서 2030년 52조원, 2040년 102조원으로 소요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 되는 것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지난 19일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덜 지우면서 더 높은 연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기초연금 인상 기조에 반대 입장을 내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정진석-주호영 지도부, ‘내홍 극복’ 과제 안고 출범

이준석 윤리위 징계 결과 관심 ‘실무당정협의체’ 구성에 합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투 톱’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전 대표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도 예고돼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일 여권 상황을 보면, 정진석·주호영 지도부 앞에 놓인 첫 과제는 ‘당 내홍 극복’으로 꼽힌다. 이 전 대표가 당 지도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가처분은 28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는 기사 회생하거나 또 한번 좌초할 수 있다. 가처분 인용으로 결정되면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을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지도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인석(왼쪽부터) 수석부대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용호 의원, 김석기 사무총장. /뉴시스

말아 원 톱 체제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당 중앙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추가 징계를 내리는 문제도 지도부가 챙겨야 할 리스크로 꼽힌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있는데, ‘탈당 권유’, ‘제명’ 등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수위와 관련 “윤리위 소관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징계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당 윤리위원회에서 사퇴한 유상범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만일 ‘성 상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기소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라고 판단돼 기소된다면 일반적으로 당원으로서 당연히 제명될 수 있는 사안 아니겠나”고 말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경쟁자인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얻은 점도 주 원내대표가 챙겨야 할 여론으로 볼 수 있다. 당내 기반이 사실상 없었던 이 의원이 42표를 얻은 게 주류인 친윤계(親 윤석열) 견제 차원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도 “의원 한 분 한 분 어떤 마음인지 다 분석할 수 없고 분석해본 바 없어서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선거는 복합 요인이 결합돼 구분이 어렵다. 몇몇 분은 너무 일방적이 될까봐 (이 의원을) 선택했다고 얘기해준 분도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정진석·주호영 투 톱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기간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이 정책과 예산안으로 구체화되는 만큼, 정기국회 기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당 내홍 수습 이후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제대로 챙겨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정 간 소통 채널인 ‘실무당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주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와 ‘고위 당정은 있는데 실무자 당정 모임이 없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논의했고 실무당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의견을 줘서 주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실무당정협의체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與 “美 IRA, 기업 피해 커”… 野 “사후약방문”

대정부질문서 한덕수 총리에 질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최근 한국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드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7400억 달러(약 910조원)의 재원을 기후변화 확대와 의료보장 확대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현대·기아차 등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이 없어 바이드 행정부를 향한 한국 정부 차원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20일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현대·기아차

가美 인플레이션 법안으로 입는 피해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한 총리는 독일이나 일본의 완성차 업체의 피해 상황을 묻는 질문에 “주로 미국의 완성차 업체가 도움을 받고 있고,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유럽 차 회사도 많고 일본 회사도 있어서 그 회사들과 보조금이 배제된 것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독일과 일본의 완성차 업체 몇몇 전기차 모델이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을 두고 지적하자 “(지원금 혜택) 기준이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인쇼어링(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에 생산지를 갖게 되는 것이니 미국이 국민 세금을 갖고 강력한 산업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협의를 잘해서 보조금

대상이 돼서 지원받을 방법을 발견해야겠다”고 했다.

이후 단상에 오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대한민국 대미 외교 정책을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체적인 국가의 안보와 역지력을 튼튼히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확장 억제제를 위한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면서 “경제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보호주의 정책을 아직 완전히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권익위, 국민 의사 최우선 고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작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논란이 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온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작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

기됐다.

권익위는 관행화된 특례제가 전문영역으로 진출을 원하는 청년층에게 불공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공정사회 기반 구축을 향한 청년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취약 분야 내지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퇴직 공직자 등에 대한 전관특혜 배제 및 행위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실태를 진단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박태홍 기자